

---

# 중견기업 정책과제

---

2021. 4

## 목 차

1.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필요 .....	1
2.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	2
3.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반대 .....	5
4. 상법 보완입법 필요 .....	6
5. 공정거래법 보완입법 필요 .....	7
6.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	8
7. 선택근로제 개선 및 주52시간제 한시적 유예 .....	9
8.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	10
9. 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	11
10.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	12
11. 시설·설비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13
12.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확대 .....	14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	15
14.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	16

##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21.1.8)로 기업경영과 산업현장에 막대한 부담 가중
  -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관계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생책임 5배, 양벌규정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 벌금부과(사망 50억원 이하, 상해 10억원 이하)) 등
-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사업주 부재로 인한 기업 경영 공백을 야기하고 생산·투자 차질을 유발
  -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온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
- 또한,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킴
  - \* (미국) 6개월 미만 징역, (일본) 6개월 이하 징역, (독일·프랑스·캐나다) 1년 이하 징역, (영국) 징역형 없음

## □ 건의내용

- 기업경영 산업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 필요
  - ①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
  - ②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면제

## □ 현황 및 문제점

- 집단소송제(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로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현행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청구 포함))에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적용
  - \*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05년 제정)」에 따라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해 도입
  - \*\*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 도입
- 법 제정 시 남소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
  - \*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소사건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 과반 수 이상이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사건 종결 처리됨. 특히, 외환위기(’98년),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고소사건 급증(’08년) 또는 급감(’10년)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가 고소사건 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소송제 도입 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폭증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상황<sup>1)</sup>
  - 특히, 최근 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 \* 중견·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소송대응력이 전무한 수준으로, 소송 진행 시 전담 인력 배치 한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클 것으로 예상<sup>2)</sup>

1) 검찰통계시스템, 고소사건 접수·처리 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4))

<2010년~2019년 고소사건 접수·처리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514,895	518,489	564,967	577,318	566,839	594,777	574,247	557,845	605,090	651,804
계		516,786	514,141	555,298	577,476	564,648	598,920	572,946	550,756	596,059	633,174
처리	구공판	32,897	31,372	32,538	37,931	39,145	37,066	38,615	36,627	38,100	41,695
	구약식	65,421	64,824	68,693	67,156	63,041	61,218	58,215	53,667	55,578	58,225
	불기소	305,261	298,600	319,527	401,086	314,545	353,292	324,142	314,286	347,263	369,180
	기타	113,207	119,345	134,540	71,303	141,917	147,344	151,974	146,176	155,118	164,074

2) 중소기업의 경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시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기획소송 증가(56.6%), △법정대응 비용증가(24.6%) 등을 우려하였으며, 특히 소송을 경험한 기업은 △소송 대응에 따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음(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20.11월)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반해, 제정안은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정합성·수용성·실행력을 갖춘 정책인지 의문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비교>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집단소송	그룹소송	집단소송	집합소송	소비자집단소송
유 형	대표당사자형	공동소송	대표당사자형	단체소송	단체소송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외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Opt-out)	구성원 명부에 등재된 자 (Opt-in)	Opt-in, Opt-out 모두 가능	가입신고한 피해자 (Opt-in)	가입신고한 피해자 (Opt-in)
소송담당자	피해자 일부	피해자 일부	피해자 일부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
특 징	우리나라 집단소송제			우리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	①공동의무확인청구 후 ②채권확정절차의 2단계 재판 구조

\* 법무부, 집단소송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9.28

- 또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청(opt-out)을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잠재적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게 되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소송수행결정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sup>3)</sup>,
- 현행 민사소송법 상의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제도\*에 비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커 남용의 위험성과 함께 사회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됨<sup>4)</sup>

\* 선정당사자 제도 :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 (민사소송법 제53조)

3) 원칙적으로 제외신청을 한 피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피해자 집단 중 자신이 피해자인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확정판결의 효력은 대표당사자가 승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패소한 경우에도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백영화, KIRI 리포트, 집단소송 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 '17.12.4)

4) 집단소송에서는 손해에 대한 개별적 입증 없이 여러 개를 묶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유인이 없는 청구들도 소송에 포함될 수 있음. 기업은 집단소송을 제기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몇 년에 걸친 소송과정을 통해 승소하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소송을 종결짓는 것을 선호. 집단소송은 변호사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되더라도 기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신석훈, KERI Brief,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17.1.25)

- 전(全)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엄격한 사전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법적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엄격한 사전규제로 작용하여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키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것
-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사전규제로 작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 실제로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중 약 25%가 기술 분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별로는 제약·바이오(9.6%), SW&프로그래밍(8.5%) 順으로 나타남<sup>5)</sup>
- 또한,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 허용(부칙 제3조)<sup>6)</sup>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
- 집단소송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 현행 집단소송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안책인 조정 및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 건의내용

-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5)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5,887건이 제기됨. 분야별로는 기술 1,467건, 서비스 1,098건, 금융 1,056건, 헬스케어 1,005건 順으로, 산업별로는 제약·바이오 566건, SW&Programming 502건, 통신장비 239건, 투자서비스 237건 順으로 나타남. (\*처리결과 : 기각 2,727건, 화해 2,561, 진행중 573건) (Stanford Law School Securities Class Action Clearinghouse, '20.11.9. 15:00 기준)

6) 제정안 부칙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

## □ 현황 및 문제점

-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 기업이 악의적인 위법행위(고의·중과실에 限)를 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 규정
- 상인 간의 상행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상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대상이 모든 상인(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하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 최근 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 \* 중견·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소송대응력이 전무한 수준으로, 소송 진행 시 전담 인력 배치 한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클 것으로 예상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기본법에 도입하여 일반화시키기보다 현행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요건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배상액을 5배 한도로 설정(제1항)하는 것은 기존 입법 사례(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3배~5배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할 뿐만 아니라,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제한하는 특약을 무효화(제4항)’하는 것은 민법 상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남

## □ 건의내용

- 상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반대

## □ 현황 및 문제점

- 개정 상법이 시행됨('20.12.29. 시행)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경영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 <개정 상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에 대한 분리선임 의무 신설 (분리선임시 3%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가능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용	소수주주권 행사시 회사법 일반규정 또는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감사위원 분리선임으로 이해관계 상충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 R&D, 투자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기업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 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 소수주주권 행사 시 회사법 일반규정은 6개월 주식보유기간 의무가 없어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가중
-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등의 개정 취지와는 달리 해외 투기자본 등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

\* 코스닥기업 (주)KMH는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총을 개최함('20.10.14). 2대 주주 키스톤PE가 특수목적법인(SPC) 6곳을 통해 보유지분(25.06%)를 분산하여 의결권을 극대화(18%)한 반면, 최대주주 측은 3%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이사 선임 건이 부결되고 감사선임 철회

## □ 건의내용

- 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입법 필요

- ①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폐지
- ②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용 규정 폐지하고 주식보유기간 6개월 부과)

##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국회 통과('20.12.9)로 기업의 부담 가중
  - \*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상장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보유 계열사, 규제대상 계열사가 50% 초과 보유 계열사 규제 대상에 포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 정보교환행위 담합 추정 등
-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규제대상 계열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함에 따라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효율적 자원의 재분배, 거래중단 위험 감소, 산업·업종 특성 상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의 순기능 상실 우려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을 상향으로 신규 설립 및 편입 시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며, 지주회사 전환비용 증가에 따라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여력 감소 우려

## □ 건의내용

- 규제 강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 필요
  - ① 규제대상 계열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
  -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지분을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2.9)로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됨에 따라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

\*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등

- 해고자·실업자까지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해고자 복직 투쟁, 사업장 불법점거 확대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생산차질 등이 우려
-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로 노조전임자와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요구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노사협력관계\* 악화와 분쟁 증폭 우려

\*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전체 141개 국가 중 130위(OECD 36개국 중 36위)로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노조의 단결권 확대 및 강화에 맞춰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이 필요

## □ 건의내용

-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방어장치 마련
  - ① 불법 쟁의행위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 □ 현황 및 문제점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18.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 부담, 구인난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업종별, 직무별 근로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기업현장 안착에 부작용이 발생
  - 기업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R&D로 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시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신제품 개발, 수시적인 제품 업그레이드 등 기업에서 R&D 관련 필수적인 일도 못하게 되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상황을 초래
  - 특히, 연구개발 직무는 특성상 대체인력 투입이 어렵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현행 선택근로제는 짧은 정산기간(3개월), 엄격한 도입요건(근로자대표 서면합의)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움
-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의 개선 및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필요

### <제조기업 A社 사례>

- 근로자의 40%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인 제조업 A社는 신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직무의 특성상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에 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업무 집중기간이 필요
  - 주 52시간으로 해당 직무의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나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 시 인력 대체가 어려움
  - 아울러, 제품 개발 효율성이 떨어져 기한이 연장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한 직·간접비 상승과 고객사의 제품 납기 이행에 어려움 발생 예상

## □ 건의내용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주52시간제 한시적 유예

\* (정산기간) 3개월→6개월, (도입요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개별근로자 합의

## □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법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제출 법안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
  -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0여개월 동안 총 8,694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 8,372건 중 규제 법안은 1,129건(13.5%)에 달함
  -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4,000여건의 법안 중 95.5%가 의원발의안이며, 이 중 규제법안은 3,924건(17.0%)

### <법안 발의 현황>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총 계	2,507건	7,489건	13,913건	17,822건	24,141건	8,694건
의원발의안	1,912건	6,387건	12,220건	16,729건	23,047건	8,372건
정부제출안	595건	1,102건	1,693건	1,093건	1,094건	322건

\* 의안정보시스템('21.3.18 기준)

-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제출안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실질적인 규제심사제도가 없어 우회 입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혁신과 도전을 지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오히려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

## □ 건의내용

-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 '20.4월 시행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통한 민·관의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에 적절히 대처
    - '21.3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
  -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확산으로 “실적저조 → 신용등급 하락 → 여신한도 축소 → 자금상환 압박 및 신규대출 기피” 현상이 지속
  - 그럼에도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한도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며, 시중은행의 경우 상환 요구가 지속
  - 신용보증기금 P-CBO의 경우 회사채 등급 BB- 이상인 일부 중견기업만 활용 가능하며, 높은 후순위채 비율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
    - 중견기업의 50.4%가 신용등급 BB 이하로 추가적인 담보제공 없이는 자금조달이 곤란한 상황으로, 이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 (중견기업 신용등급 분포) 중견기업 전체 : A이상 20.1%, BBB 29.5%, BB이하 50.4%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초기중견기업 : A이상 16.2%, BBB 28.8%, BB이하 55.0%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 : A이상 53.0%, BBB 27.0%, BB이하 20.0%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선진화 방안 세미나 자료 발췌 '20.1월 중견기업연구원)

## □ 건의내용

- 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한도 확대 및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수준의 대출 만기 연장 지원
- ② P-CBO 신용평가 등급별 최대한도 확대(예 : BBB 기준 500억원→700억원), 신용등급 기준 및 조달비용 부담 완화
  - \* P-CBO 지원 신용등급 기준 완화(B+)를 통해 현재의 중견기업 금융 사각지대 해소 가능
  - \*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조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조달비용 절감 가능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6개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으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20%) 시 최고 실효세율은 60%로 세계 최고수준
- 기업인은 승계보다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을 승계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지분을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 유지 및 방어에 어려움
- 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세율 및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제도 활용에 한계

## □ 건의내용

-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지원제도 개편
  - 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25%) 또는 자본이득세 도입
  - ② 가업상속공제 대상(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 및 한도 확대(최대 500억원→1,000억원)
  - ③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④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상속세 공제한도 수준으로 확대
  - ⑤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 □ 현황 및 문제점

- 수요부진,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구 분	금액(조원)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계획)	2019	2020	2021(계획)
대 기 업	119.3	123.6	127.4	130.6	3.6	3.1	2.5
중견기업	28.2	24.6	21.6	19.7	△12.7	△12.2	△8.6
중소기업	20.2	18.0	15.4	15.4	△11.2	△14.1	△0.2

\* 한국산업은행, 2020년 하반기 설비투자계획조사

- '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주요 시설에 대한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이 감소되어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우려

\* 세법개정에 따른 주요시설 세액공제율 변화

안전시설 (前) 중소 10% 중견 5% 그 외 1% → (後) 중소 10% 중견 3% 그 외 1%

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前) 중소 10% 중견 5% 그 외 3% → (後) 중소 10% 중견 3% 그 외 1%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 (前) 중소 7% 중견 3% 그 외 1% → (後) 중소 10% 중견 3% 그 외 1%

- 주요 시설·설비투자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위축된 중견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성장사다리를 확충할 필요

## □ 건의내용

- 시설·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조특법 제24조)

\* (현행) 일 반 : 중소 10%, 중견 3%, 대 1% ⇒ (건의) 중소 10%, 중견 5%, 대 1%  
신성장 : 중소 12%, 중견 5%, 대 3% ⇒ 중소 12%, 중견 7%, 대 3%

### ②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조특법 제28조의3)

\*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21.12월 일몰

## □ 현황 및 문제점

-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R&D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투자 축소가 불가피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성장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단절, 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또한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여 투자 부담 가중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25%→중견 1~3년차 15%→중견 4~5년차 10%→중견 6년차 이상 8%→그 외 최대 2%
-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대상기술을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등 일부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지원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여 신산업 분야 수출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의 제도 활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 중견기업 수출 비중('15년) : 바이오·헬스 52.8%, 항공·드론 42.8%, 시스템반도체 38.1%
  - \* '19년 말 기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31개사(8.6%)

## □ 건의내용

### 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 \* 중견기업 진입연차별 세액공제율(현행→건의) : 1~3년차 15%→20%, 4~5년차 10%→15%, 6년차 이상 8%→13%

### ②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현행) 중소기업 30~40%, 코스닥상장 중견 25~40%, 그 외 20%~30% ⇒  
(건의) 중소기업 30~40%, 중견 25~40%, 그 외 20%~30%

## □ 현황 및 문제점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생협력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중견·대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수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상생협력 촉진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
  - \* 주요 규제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수·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됨(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대표이사에게도 벌금 부과)
- 특히,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법 상 중견기업 개념이 반영되지 않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대상이 되는 반면, 수탁기업으로서는 보호받지 못해 불합리
  - \* 상생협력법 상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 \*\* 중견기업특별법 특례를 통해 수탁기업 납품대금 지급 보호에 한해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을 수탁기업으로 간주(중견기업특별법 제13조)

## □ 건의내용

- ① 자율적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전면 개정
  - \* 각종 규제 및 벌칙 조항을 폐지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전면 개편
- ② 상생협력법 상 중견기업 개념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 '22년 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어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23년) 자산 5천억~2조원→('24년) 상장사 전체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종속회사 수\*, 업종의 동질성, 소재지 등에 따라 약 6개월~1.5년 소요 예상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3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이며,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임(평균 28사) →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원인

- '18년에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가 별도(본사)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검토→감사) 작업을 하는 데에 약 6개월~1년 소요\*

\* 외부감사인인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됨에 따라 그간 운영해 온 것의 업데이트 수준이 아닌 사실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부 재구축하는 수준으로 프로젝트 진행

-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해외 종속회사가 구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보다 더 많은 기간 소요 예상

\* NYSE에 상장한 LG디스플레이의 경우 '04년 SOX(미국의 회계개혁법: Sarbanes-Oxley Act) 대응을 위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본사 및 7개 해외종속회사 기준) 당시 약 2년 6개월 소요 ('04.6~'06.12)

- 코로나 19 장기화로 해외출장 및 현지법인의 지원 등이 어려워 기본 업무 수행자체가 어려우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시기 내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비대면 인터뷰 등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현지법인 폐쇄·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업무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산출물의 정확성\*, 업무 효율성 등을 감안시 한계 존재

\* 충분한 상호이해나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과적 통제 설계가 곤란(현지인원의 답변에만 의존함에 따라 추가적인 관찰, 재수행, 추적조사 한계)

###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절차 및 주요 산출물 >

① (구축 절차) 각 업무 프로세스(매출, 구매, 생산, 재고관리 등) 현업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확인  
→ 재무제표 왜곡위험 식별 → 통제설계 → 평가(문서검사, 관찰, 추적조사 등) → 관련 교육

② (주요 산출물) 업무 프로세스별 업무흐름도, 업무기술서, 통제기술서, 운영매뉴얼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핵심은 주요 업무 프로세스별 Risk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는 것으로 현지 담당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 □ 건의내용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1년 이상 연기

\* 미국 SEC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두 차례 연기(최초: '06년 시행 → 1차 연기: '07년 시행 → 최종: '08년 시행)